

# 서울시, '설날 5대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설날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소방안전, 제설, 교통, 물가, 의료 등 5개 대책반을 마련한다. 이를 총괄·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종합대책은 ▲안전 ▲교통 ▲나눔 ▲편의 ▲물가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연휴 전 쪽방 등 화재취약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소규모 숙박시설 888개소 중 일부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지도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에 집중한다.

설 연휴기간 동안은 화재특별경

## 내달 1~7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 대중교통 새벽 2시 연장운행 실시

## 중점관리 품목 가격 모니터링 진행

계근무를 실시해 상시가동상태를 유지한다. 재난상황실 운영 등 한파·강설 대비 및 신속 조치를 위한 재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귀성·귀경객 교통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도 증대한다. 고속·시의버스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평시대비 22% 증회 운행해 하루 평균 13만여 명을 수송한다.

버스와 지하철은 다음달 5일부터 6일까지 막차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심야엘비버스 9개 노선 72대를

새벽 3시45분까지, 심야택시 2956대를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오전 9시까지 운행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설날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응급 의료기관 67개소, 휴일지킴이약국 2725개소, 당직의료기관 2001개소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사과, 배, 양파, 배추 등 주요 성수품 9개에 대해 최근 5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0% 추가 인상한다. 중점관리 품목(18종)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수

급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시는 불가대책반 운영을 통해 불가상황 모니터링 및 답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자세한 교통정보, 전통시장 문화 행사, 병원·약국 등 서울시 설 연휴 종합정보는 120다산콜센터, 서울시홈페이지, '모바일 서울 앱', 120다산콜센터 트위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대 설날 종합대책을 가동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설 연휴 전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동안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 박원순 vs 김부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매개로 '대선' 기싸움

여권 내 집요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화문광장을 매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 행안부가 서용정 부청사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게 됐다는 명분에서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진 것처럼 보이지만 박 시장과 김 장관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기싸움을 시작한 게 이번 충돌의 본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과 행안부는 지난 23일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한 정부서울청사 기능 훼손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행안부는 '서울시 계획대

결정 행안부와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를 있었음에도 행안부의 보도자료에는 '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위양스가 있다는 게 시의 불만이다.

행안부 입장표명 시점 역시 논란적이다. 도로망 개편에 의한 정부서울청사 우회도로 조성 방안은 지난해 4월에 발표됐었다. 설계도 공모과정도 있었지만 정부서울청사 우회도로 조성은 공모 때 전제조건으로 제시됐다. 결국 우회도로 조성이 일찌감치 확정돼있음에도 행안부가 그 당시는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박 시장과 김 장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행안부 공개적으로 반대해 서울시 "4~5차례 실무협의 했는데 왜 그러냐" 불쾌

로 광화문광장이 개조되면 정부서울청사가 공공건물로서 기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표면적 정점은 정부서울청사 기능 훼손 여부다.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설계안대로 시공하면 정부서울청사 정문과 차량 출입구가 폐쇄되고 지상 주차장은 공원으로 바뀐다. 주차장 부지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옮겨놓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는 행안부 입장표명 직후 시 관계자 명의로 "이번에 발표한 당선자를 토대로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4~5차례에

관 일찌감치 대선 전초전을 시작했다는 분석에 더욱 힘을 실고 있다.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과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제동 등 폭 발력 있는 사안을 연이어 터뜨리며 존재감을 키우자 경쟁자인 김 장관이 견제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다음달 설 연휴 이후 단행될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행안부 장관직이 끝나면 대거로 내려가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런 해석에 손사래를 쳤다. 이번 입장표명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자신의 대표사업 중 하나인 여기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김 장관이 이익을 제기와 신경전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설날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이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입하러 방문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서울 신축건물 미세먼지 방지 설계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설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자치구는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향후 서울에서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조하

는 경우 미세먼지(입자 지름 1.6~2.3㎛)를 95% 이상 걸러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줄이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